

2005. 10. 20(木)

# 第38回 韓經研 포럼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UM

■ 주 제 : 사회양극화와 참여정부의 보건복지 정책방향

■ 연 사 : 김근태 장관 (보건복지부)

# 사회양극화와 참여정부의 보건복지 정책방향

보건복지부 장관 김 근 태

##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김근태입니다.

노성태 한국경제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귀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과연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경련 회관 20층에 가서 과연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저에게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무얼까 생각했습니다. 보건복지정책만을 듣자고 이른 아침에 저를 부를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의 이른 아침이 민망하지 않겠는가? 아침부터 모여서 복지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를 누구는 말하고 누구는 듣고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아주 끔찍한 일이겠지요

그렇다면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자유주의, 사회양극화,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문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복지... 할말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여러분께 솔직하게 나의 이런저런 생각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경제와 기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비판도 받고 토론도하고 싶습니다. 사실 경제학자도 있고, 실제 경영자들도 함께 모인 이러한 토론자리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나 자신이 주인공 자리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귀한 자리라 생각하고 궁금했던 점을 묻고 많이 배워가고 싶습니다. 활발한 대화의 토론의 시간을 기대합니다.

## □ 외환위기와 IMF처방에 관한 소회

### 1. 개요

한국경제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마치 폭주 기관차처럼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10%대의 경제성장률을 자랑하던 한국경제는 IMF외환위기 이후 주춤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저성장시대로 진입했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성장률이 만능은 아니지만 아직 더 성장해야하는 우리의 처지에서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성장이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성장잠재력의 저하가 동반된 구조적인 것인지 매우 중요합니다.

### 2. 외환위기원인은 신자유주의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한 견해는 지금도 분분합니다. IMF 직후에는 재벌문제와 정실자본주의 등 한국경제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었고 단순히 외환정책의 실패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물론 재벌의 투자실패와 금융산업의 부실 등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경제에 대한 진단 및 조절능력 상실 등 한국경제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의 숨은 주역은 신자유주의였습니다.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와 함께 본격화 되었습니다. 96년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OECD에 가입하고 금융자유화를 수용하여 국제핫머니에 한국의 자본시장을 열어 주었습니다. 당시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미국은 자신들이 우위에 있는 농업, 서비스산업, 금융산업 등의 개방을 전세계적으로 강요하고 있던 터라 세계화는 따라야하는 유행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 물정을 너무나 몰랐다고 할까요.

우리는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어떤 위험을 가져오는지, 어떻게 금융시장 불안과 리스크를 관리해야 해야 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만불이 넘고 OECD에도 가입하고 마치 곧 선진국이 될 듯한 기분에 젖어있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그 누구도 금융시장 개방의 좋은 점만 얘기했지 그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았고 금융시장 개방에 대해 사전학습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를 품미했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열풍에 말려들어 너무나 큰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 3. 외환위기보다 더 무서운 IMF처방

그런데 외환위기보다 더 우리 경제에 해로웠던 것은 바로 IMF의 처방이었습니다.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에 근거를 둔 IMF의 처방은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를 더욱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IMF의 횡포가 얼마나 흉했으면 당시 스티글리츠 IBRD 부총재까지 비난을 했겠습니까. 그는 IMF가 한국에서 했던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비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IMF처방을 그대로 따라서는 영원히 IMF통치를 벗어날 수 없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생겨났습니다. 인도네시아는 IMF가 권고한대로 빈곤층지원을 하지 않아 폭동이 일어났고 경제가 무너진 반면, 한국은 김대중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어서 빈곤층, 저소득층이 굶지는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했기 때문에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말을 외국전문가들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민족이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IMF의 어설픈 처방에도 곳곳이 살아남아 재기를 하고 있으니 한강의 기적, 민주화의 기적에 이은 세 번째 기적이 IMF탈출의 기적이라고 말한들 흠이 안 될 정도입니다.

당시 한국 경제가 IMF로부터 받은 처방전인 초고금리와 초긴축 정책, 고강도 재벌해체, 외자도입은 참으로 끔찍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제조업은 물론 금융기관이 위기에 처했고, 우량기업들이 헐값에 외국자본에 넘어갔고, 수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도산하였고, 수많은 근로자가 해고당해 중산층과 서민층이 몰락하고 빈익빈 부익부는 한층 격화되었습니다. 그야말로 IMF 처방전이라는 탈을 쓴 신자유주의 폭

풍속에서 한국 경제는 심각한 양극화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한마디로 IMF의 처방은 우리경제를 치료해 주는데 보다는 사회적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데는 확실한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 대결구도가 강화되어 사회적 비용만 가중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은 물론 민주주의의 성숙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 □ 한국판 신자유주의는 영미식 시스템의 도입

### 1. 문제제기: 영미식 과연 유용한가?

IMF체제는 한국에 영미식 경제시스템을 강요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시스템의 영미화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영미식이 한국사회에 유용한가입니다. 만약 영미식이 좋다면 기꺼이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 2. 영미식 모델의 맹점

#### 1) 재벌문제를 풀 수 없다.

영미식 자본주의 모델은 한국경제의 딜레마를 증폭시킵니다. 주주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영미식 모델에서 재벌문제의 해결은 난망합니다. 이제 막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재벌을 해체하고도 한국이 국제경쟁에서 국가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벌은 자본주의 후발국인 한국이 거대한 투자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으로 나라의 운명을 건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재벌은 단순히 재벌가의 것이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재벌의 막연한 부정과 해체는 한국경제발전사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재벌은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지 악의 축이 아닙니다. 재벌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 2)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영미식 자본주의 모델의 또 다른 문제는 사회양극화의 심화입니다. 신자유주의 논리에 의해 사회양극화는 오히려 당연시됩니다.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는 자유주의 자체에 내장되어 있으나 신자유주의는 이를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주의의 역사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본래 중세 몰락과 함께 등장한 근대 자유주의는 개인을 제일 중요시 합니다. 그런데 한 개인의 자유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문제와 평등이라는 인류의 보편가치를 전혀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 때문에 자유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대세가 되자 자유주의가 민주주의를 포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본주의의 폐해가 더욱 심해졌고 사회주의가 등장하기까지 하고 결국 복지 국가가 대세가 되자 급기야 자유주의는 복지국가라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1974년을 전후로 세계자본주의가 불황에 직면하고 복지국가들도 성장이 둔화되는 등 궁지에 몰리자, 복지국가의 문제를 ‘복지병’이라 지적하며 새롭게 개인의 가치를 주장하며 등장한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입니다.

2차대전이후의 호황기에 절정을 구가했던 복지국가시스템과 케인즈 경제학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복지의 축소와 케인즈경제학 적인 정부의 시장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경제불황의 모든 죄를 과도한 복지시스템과 정부의 시장간섭이 뒤집어 쓴 것입니다. ‘큰시장-작은 정부’가 새로운 만병통치약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영국과 미국에서 신자유주의가 득세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 두 나라는 유럽의 복지국가들보다 복지수준이 높지도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대처와 레이건이 동시에 정권을 잡고 신자유주의를 세계로 전파시켰는데, 왜일까? 그것은 영국과 미국이 동시에

겪었던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 때문이었습니다. 후발자본주의 국가인 일본과 독일에게 기술에서 추월을 당했고 한국과 같은 신흥자본주의 국가들에게 가격경쟁에서 밀리게 된 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경제적 위기에 처해 국가적 결단의 순간을 맞이한 것이었고 그 탈출구가 신자유주의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탈규제, 민영화, 감세라는 레토릭이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물론 영국과 미국 경제는 신자유주의를 통해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부문과 서비스부문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두 나라는 세계화와 시장개방을 통해 많은 이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희생, 즉 중산층의 몰락과 고용불안을 동반했습니다. 미국의 지니계수변화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레이건의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기 이전인 미국의 지니계수는 67년 39에서 80년 40으로 10여 년 동안 1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80년대부터 급격히 악화돼 81년 40.7에서 2003년에는 46.4로 6포인트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6포인트 속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고통이 존재할 지 생각해보면 끔찍한 일이다. 참고로 다른 선진국들의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2003년에 독일(28.3), 프랑스(32.7), 캐나다(33.1), 영국(36.0) 등 이었습니다. 역시 영국과 캐나다 등 영미식 시스템을 가진 나라들의 지니계수가 높습니다. 2003년에 우리나라는 31.6이었습니다. 상징적입니다. 독일과 미국의 중간에 우리가 있습니다.

3) 한국의 미래에 맞지 않는다.

-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한국의 사회양극화의 현실은 끔찍하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라서 더 절실하게 체감하는 측면이 있지만 일반 언론보도 만으로도 충분히 실감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올 연초에 대구에서 네 살짜리 김모군이 장롱에서 굶어죽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지체가 있었고 아버지가 건설노동자였는데 실직상태였습니다. 또한 근래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2위 입니다. 특히, 40대 남성과 65세이상의 남성과 여성들 노인세대의 자살률이 높습니다. 40대는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을 실패가 주요인이고 60대 이상은 가난과 소외 때문입니다. 50대 딸이 70대 치매어머니를 안고 지하철로 뛰어든다든지 93세 넘은 할아버지가 94세의 할머니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스스로 자살하는 등 비극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미국의 뉴올리언스 사태는 미국식 모델의 현실을 너무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TV를 통해 직접 보았습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대부분 흑인들이었고 탈출수단인 자동차도 없이, 배수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뉴올리언스는 시민의 27.9%가 연간 9,000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연명하는 빈곤층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죽했으면 뉴욕타임스가 지난달 4일 “세계는 최악의 물난리뿐 아니라 인종 분열, 계층 양극화로 별거벗은 사회를 목격했다”고 보도했겠습니까.

한국은 후발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후발자의 이득을 만끽하며 선진국의 뒤를 바짝 뒤따라야 합니다. 영미식 사회경제 모델은 우리가 추구할 수 없는 모델입니다. 우선 한국은 미국과 같은 사회불평등을 감당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처지가 너무나 다릅니다. 거대한 영토와 일상화된 인종차별, 그리고 세계최강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미국과 작은 영토에 단일민족, 게다가 세계 주요 경제-군사 대국의 사이에 놓인 분단국인 한국의 처지는 전혀 다릅니다. 한마디로 영미식 모델은 영국과 미국만 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정치적 사회적 대혼란까지 무릅쓰고 영미식 모델을 추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참고할 모델이 많습니다. 영미식 신자유주의 모델로의 성급한 올인은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 4) 어설픈 한나라당의 신자유주의

최근 한나라당이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을 어설픈 흥내 내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감면의 실질적 수혜자가 재벌과 극소수 부유층임이 너무나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이라는 신자유주의의 교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올 연초 한나라당과 재계의 의견을 수용해 정부는 소득세 1%와 법인세 2%를 감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조세체계상 직장생활자와 자영업자의 절반이 세금을 안내고 법인세 총액의 대부분을 소수의 대기업들이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의 효과가 경제 전체적으로 퍼지지 않고 매우 미약하고 심지어는 특혜적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감세 역시 누진율로 하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더 혜택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인세 인하와 투자간의 상관관계는 아직까지도 경험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올 초의 법인세 2%인하로 조세수익이 3~4조원 줄었습니다. 새로운 한나라당의 감세안은 9조원 가까운 세금을 줄이자는 것인데 정부예산의 실태를 잘 아는 처지에 정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우선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설령 가능하다면 현재 예산에서 9조원을 어디서 깎을 건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나라당의 딜레마가 바로 이점입니다. 레이건을 흥내 냈지만 레이건처럼 사회복지예산을 삭감해 감세분을 보충하겠다는 솔직한 선언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책임한 포퓰리즘일 뿐입니다.

최근 이코노미스트와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엘트먼은 지난해 출간한 [네오코노미]라는 책을 통해, 소위 네오코미스트의 감세혁명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경제네오콘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이자소득세, 배당이익세, 자본이득세, 법인세 등의 과감한 철폐를 부르짖습니다. 과거 레이건 시대의 공급경제학이 근로의욕 고취에서 성장원천을 찾는다면, 경제네오콘은 저축과 투자의욕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엘트먼에 따르면, 노동소득에게만 편중된 과세는 양극화를 폭발지경으로 몰아갈 것이고 ‘기회’가 능력이 아니라 부의 세습에 의해 결정되며, 재정의 악화도 명약관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 네오콘이 시도하는 미래는 매우 비관적인 미래, 암울한 미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 조세체제와 경제환경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는 그저 몇몇 소수의 부자들을 더 부자가 되게 할 뿐입니다. 한국의 법인세 수준은 OECD국가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홍콩과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를 비교하는 짓은 그만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제조업국가입니다. 우리의 주력산업은 모두 제조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서야 어찌 홍콩과 싱가포르를 비교하는 것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투자는 몇몇 부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세는 투자를 결정하는 아주 작은 변수일 뿐입니다. 내수 증진 역시 부자들이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의 한계소비성향이 지극히 낮다는 것은 경제원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치품이 더 팔려서 내수시장이 좋아진다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내 기업 중 소위 사치품을 파는 기업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주머니가 풍족해져야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숨통이 트입니다. 그게 우리의 산업구조고 경제의 현실입니다.

##### 5) 신자유주의의 대안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이라는 명분아래 실질적으로는 경제 부문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개개인에게 전가하는 잘못된 시스템입니다. 애초에 수준이하의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던 우리 사회에서 무분별한 신자유주의 및 시장중심주의는 개인과 가족의 파탄을 조장할 뿐입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여전히 곳곳하게 훌륭한 복지시스템을 운영하며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성취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스웨덴과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고 독일도 역시

건재합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을 딛고 자신들만의 완전고용 체제를 어느 정도 지켜가면서 재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의 특징은 신자유주의를 자기화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들 나라들은 양극화로 인한 내부적 충격을 최대한 줄이면서 거세지는 국제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참고해야 합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제조업 중심인 나라들의 전략을 배워야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이 산업의 근간일수록 기술혁신과 고용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또한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무엇을 할 것인가?

#### 1.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한국경제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 경제를 더 발전시켜야하고 동시에 양극화를 해소할 사회복지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에 한국경제는 물론 대한민국 나아가서는 한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을 위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시장이 필요합니다. 사실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와 성공에 우리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단순 조립으로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의 기술력으로 우리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 2. 남북경협과 통일

또 다른 새로운 성장동력은 남북경협과 통일입니다. 남북경협의 활성화는 한반도 위기의식을 불식시킬 것입니다. 남북의 우수한 인력이 개성에 모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은 물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북한에 약간의 지하자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우리 민족의 최대 자산은 사람입니다. 지식과 기술 집

약적인 산업을 집중적으로 개성에 유치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경협은 2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통일비용의 절감과 남북경제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점입니다. 주변 국제정세의 변화에도 굴하지 않고 남북경협의 기초와 진행속도가 변하거나 늦춰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중-일 FTA가 각국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난한 길이라면 남북경제공동체는 절박하고 손쉬운 길일 것입니다.

### 3. 사회적 대타협과 복지: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우리나라는 복지에 관해서 신참 국가입니다. 서구의 제도는 많이 알지만 직접 실행해 본 경험도 부족하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복지는 한발도 물러설 수 없는 당면과제입니다. 복지는 복지부의 투쟁으로 강화되는 게 아닙니다. 국가자원의 분배문제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경제나 복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향이 바뀌어 휘청거리지 않으려면 사회적 대타협 수준의 큰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민주화 이전에는 독재자에 의해 사회적 대타협이 강제되었고 묵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화가 이루어져 서구의 나라들이 겪었듯이 우리도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절호의 기회는 사실 외환위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무지와 오해 속에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에 실패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모두 힘이 듭니다. 기업주들도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고 IMF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느라 힘이 들고, 직장인들은 구조조정의 칼날 앞에 늘 불안합니다. 소득만 따졌을 때 빈곤층이 70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지 않는다면 중산층이 약화되어 이 나라의 민주주의조차 위협받을 것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대원칙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잘사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협력을 하고,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보자. 불만스럽더라도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경제를 살리고 복지를 확보하자. 당신도 어렵지만 나도 어렵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의 부담을 나누어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현안들도 사회적 대타협 속에서 명확하게 방향성을 갖고 해결될 것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문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도 국민통합연석회의의 성공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 □ 맺는말

주제넘게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나의 진심을 보여야 남의 진심을 볼 수 있다는 말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말씀과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